10·30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여야 정치권은 '10·30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총력 태세를 갖추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경기 화성갑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가 화성시 사강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화성시 봉담읍 하나로마트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한길 대표 등과 함께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오일용 민주당 후보/연합뉴스

안행위 국정원 수사 당시 수사팀 의견 묵살 추궁

법사위 야 "삼성떡값 의혹 黃법무 감찰 받겠나"

국감 현장

기재위, '복지증세' 여야 불꽃 설전

복지위, 의원 발언 대응 지침 논란

2013년 국회 국정감사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댓글사건 수사 축소 공방이 벌어진 안행위, 복지증세 공방이 벌어진 기재위가 주목을 끌었다.

또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삼성 떡값수수'의혹이 다시 제기됐으며 이틀 전 복지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인 복지위는 한때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안행위**=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당시 수사팀 실무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송파서로 전보되기 전 남긴 수사지휘서에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적시된 점을 거론하며 "후속 수사팀은 이 내용을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이 누명을 썼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국정원 직원 김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소명자료가 미비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권 과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외압 때문에 영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권 과장의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위**=기획재정부에 대한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른바 '복지증세론'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 증세'에 나설 때라고 맞섰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여 시선을 끌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강조된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확실히 반성해 새로운 성장 방안을 마련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우리는 고용을 강조한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나"고 다그쳤다.

이에 현 부총리는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기반을 이명박 정부에서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한다는 점도 다르다"고 받아쳤다.

◇**법사위**=법무부 국감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문제와 황교안 장관의 삼성 떡값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장관의 삼성 떡값 의혹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후 '내게도 의혹이 제기된다면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고 했다"며 "일부 언론이 과거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춘석·서영교·박범계 의원 등도 황 장관에게 "떡값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을 의향이 없느냐"며 거듭 추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미 대검찰청의 감찰과 특검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기꺼이 감찰을 받겠지만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같은 의혹에 대해 감찰하고 수사하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복지위**=이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복지부가 여당의원에게 배포한 문건이 공방의 소재가 됐다. 의원들은 문건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했지만 복지부 차관의 사과 요구 등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오전 내내 국감 질의도 못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가며 논란을 벌이다가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피감 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야당 의원이 이런 소리 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지침을 준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에 정책협의차 참고용으로 요청한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으로 국감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자료를 요구한 의원으로서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1억원 이상 연봉 직장인 호남은 3.8%" 이낙연 의원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1554만명 가운데 급여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이 37만3000명이며, 그 중 68.8%인 25만6000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1억원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전체의 2.4%였다.

억대 연봉 직장인은 서울이 1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6만6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영남권에는 울산 2만8000명, 부산 1만5000명, 경남 1만4000명, 경북 1만2000명, 대구 6000명 등 전체의 20.1%가 살았다.

이어 대전과 충남 각 9000명, 충북 4000명으로, 충청권이 5.9%였다. 전남과 전북이 각각 5000명, 광주는 4000명으로 호남은 3.8%에 그쳤다.

"선도 농가 육성사업, 부농만 키웠다" 김승남 의원

농촌진흥청의 '선도 농가 경영 육성사업'이 부농(富農)만 집중 육성해 농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승남(보성·고흥) 의원은 17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선도 농가 육성사업'은 농업소득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가족농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경영전략 지원을 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도 실제 선정된 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연평균 5144만원이었다"며 "본래 사업취지인 '강소농'육성이 아닌 '고소득 부농'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이 시작된 작년에는 '모델농가' 800가구를 지정해 가구당 800만원, 총 6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올해부터는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도 농가 육성사업은 소득이 낮은 농가 위주로 대상선정을 하고 이들을 고소득 농가로 육성하여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귀농귀촌센터 정보 부정확…상담 감소" 황주홍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상담 신청양식이 복잡해 귀농상담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처인 귀농·귀촌종합센터가 귀농정보에만 치우쳐 빈집 정도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업무인 상담 인원은 지난 1월 1만6644명에서 9월 741명으로, 8개월 사이 45% 감소했다"며 "이는 신청양식이 너무 복잡해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담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상담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귀농·귀촌 종합센터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 때문에 시·군 상담실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軍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공세 강화

민주당은 17일 작년 총선과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의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집중 공세를 펴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 정치개입"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자체 감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사비밀'을 이유로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면 비밀을 지키는 게 맞지만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는 마당에 범죄행위 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날이 '유신 선포일'이라는 점에 착안,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유신 망령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며 여당을 몰아붙였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41년 전 오늘 박정희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10월 유신이 단행되고 모든 민주주의가 정지됐다"며 "10·30 재·보선 현장에서 유신 망령이 머무르지 않게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업 잘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종 주거지 504평 땅에는 소형APT나 다세대 적합 10억5천
◦ 원룸·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텔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옥등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접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등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법인이전23억
◦ 대인동 소방서 부근대로변 상업지 694㎡(210) 건평158평 광주은행 본점부근 공시지가에 매도11억6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증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건설의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나주시 남내동 2종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